

총선 공소시효 만료... 광주·전남 의원 4명 ‘재판행’

전체 기소 11명 중 지역 의원 4명
김문수·신정훈·안도걸·정준호 포함
여론조사 왜곡·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화홍보방·이중투표 권유 혐의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일로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선거법 위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되며 기소된 총 11명의 국회의원 중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4명에 달해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6건(95명)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7건을 불송치 등 종결로 결정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 38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던 45건은 결국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등 종결 처리됐다.

전남경찰은 총선과 관련 82건(11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

운데 31건(4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광주·전남 현직 국회의원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광주·전남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안도걸(광주 동남을)·정준호(광주 북구갑)·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총선 선거 과정 도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가 4%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아닌 전 서울시의 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

를 받는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자 10명에게 총 25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선을 위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불법으로 발송됐고, 이를 위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 3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나주지역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화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전화를

통한 경선 여론 조사의 경우 ‘당신은 권리당원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 전화가 끊어지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다’고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지역 주민들에게 ‘경선 기간 우연히 만난 노인 일자리 어르신과 대화 중에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무의식 중에 나온 실언에서 비롯된 일이고 실수든 고의든 모든 것이 제 발언에서 시작된 일이니 책임을 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정 의원은 선거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2명에게 4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과,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 1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지난해 7월 국회의원예에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구민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 명의로 보낸 혐의로 송치된 박군택(광주 광산갑)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하지만 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인 B씨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에서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도걸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각각 오는 28일과 30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신정훈 의원과 김문수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고흥 주택서 ‘3도 화상’ 60대 여성, 충북 청주 이송 뒤 사망

고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충북 청주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졌다.

10일 고흥경찰과 고흥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4분께 고흥군 도양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9일 오전 11시30분께 현장에 도착해 당시 얼굴, 목, 가슴, 양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세입자 A(69·여)씨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헬기를 동원, 고흥군 고흥읍 박지성공설운동장에 9일 오후 1시42분께 착륙해 오후 1시46분께 환자를 인계

했다. 이후 충북소방본부와 협조해 오후 2시47분께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화상 전문 병원에 환자를 이송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10일 오전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화재로 주택 59.5㎡ 중 18.5㎡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 8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찬기



국악풍류 콘서트 ‘국악풍류 콘서트’ 국악문화학교 수강생 공연이 10일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려 최경순씨 등이 가야금병창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고향 선배 살해·유기한 50대 범정서 선처 호소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0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 한 공터에서 같이 술을 먹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B씨가 부모와 관련된 욕을 해 화가 났고 크게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법률 대리인은 “A씨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유족들을 위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11월7일 오후에 열린다.

민원기

완도 선착장 인근서 바다에 빠진 80대 숨져

완도의 한 선착장 인근에서 어선에 타 있던 8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5분께 완도 군외면 영풍리 선착장 앞 바다에서 A(82)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본인 소유의 어선을 이동하던 A씨는 선박 위에서 발을 헛디뎈 바다에 빠졌고, 당시 선착장에 입항하던 다른 어선 선주가 이를 목격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윤준명

이태원 참사 잇었나...전남 3곳 방재안전직 공무원 0명

고흥·영암·영광군 인력 없어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현황 ‘제각각’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전남 3곳을 포함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만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

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차례 재난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

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땀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의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재난이 갈수록 복잡·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이

광주 북구 상가건물 지하 노래방서 불...36명 대피

광주 북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 내 목욕탕에서 손님 3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0일 광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18분께 북구 오치동의 한 상

가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61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12분만에 완전 진화했다.

화재 당시 같은 건물 2층과 3층 목욕탕

에서 손님 36명이 자력으로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내부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1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및 환풍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준명